

포용적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일 시 : 2019. 7.17(수)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최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단법인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후 원 :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주 제】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 가능성

【주제 발표】

김 용 하 교수	5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문】

1) 조 중 근 회장	25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 신 소 정 교수	31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3) 김 동 섭 논설위원.....	37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부 록】

본 연구회 연혁, 언론기사, 공지사향

프로그램

1부

사회 : 김 기 영 교수
(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1) 개회선언

2) 국민의례

3) 축 사 차 흥 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前 보건복지부 장관)

2부

사회 : 이 정 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 주제발표:

김 용 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IT금융경영학과)

2) 토 론 자:

- ① 김 동 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 ② 신 소 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 ③ 조 중 근 회장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3) 참관자 질의/응답

4) 총 마무리 발언: 김 용 하 교수

Contents

I. 포용적 복지정책의 주요 내용

1. 문제의식
2.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3. 주요내용

II. 포용적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1. 저성장·저출산·고령화
2. 중기적 재정 문제
3. 장기적 재정 문제

III. 지속가능성 제고 방향

1. 세대내의 원칙 정립 : 가계·기업·정부의 책임 분담
2. 세대간의 원칙 정립 : 제도별 세대간 분배원칙 정립
3. 인구 구조의 안정화 : 고령화·저출산 대응전략 수립

2

I. 포용적 복지정책 : 포용적 복지국가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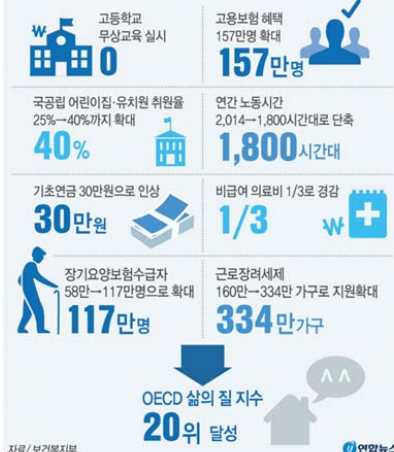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복지정책 측면의 접근



- 보건복지부 주최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정부업무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본 틀 제시
- 포용적 복지국가 = 포용적 성장국가
- 복지 - 일자리 - 성장의 선순환 정책 방향 제시
-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은 OECD의 주요 Agenda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목표

사회보장기본계획 -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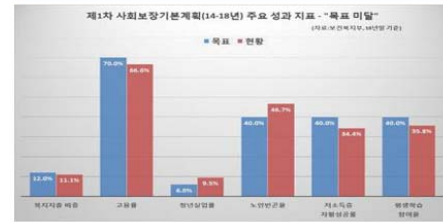
3

1. 포용적 복지정책 :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차 계획 비전과 전략체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 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중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중장기 방향 (40)	고용	▶ 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22.3(17) → 15.0%(40)) ▶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 사회복지서비스를 위한 1인 1연금 및 다중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기초연금 확대
	건강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 생애주기별 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양생활균형 달성
	소득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
기반	건강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 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공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성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1. 포용적 복지정책 :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의 구체화 (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

- ▶ 아동수당 확대
- ▶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 ▶ 고교 무상교육 시행
-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도입
- ▶ 기초연금 인상
- ▶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 치매 국가 책임제
- ▶ 행복주택 공급 확대
- ▶ 커뮤니티 케어 확산



1. 포용적 복지정책 :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의 구체화 (장애인-여성-저소득층)

- 장애인연금 인상
- 육아휴직 활성화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 근로장려세제
- 최저임금 준수 강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자활급여 단가 인상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



6

1. 포용적 복지정책 : 소득주도 성장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중심 축으로서의 복지정책

복지 이전소득 확대를 통한 소득 재분배

2018년 소득주도성장 예산의 경제적 파급효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고용
2018 투입액(원)	9조8199억	1조913억	12조3088억	1조
생산유발효과(원)	24조6814억	2조7429억	30조9371억	2조5134억
소득창출효과(원)	9조4363억	1조487억	11조8280억	9609억
고용창출효과(명)	21만1177	2만3468	26만4700	2만1505

자료: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저임금, 기초연금, 아동수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보고서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주축을 이루는 것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최저임금 공무원고용 등이지만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정부예산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의 경우 금년 9월부터 확대 혹은 시행되므로 2019년 이후에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상대적 크기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예산으로 만드는 복지 일자리 창출

-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의 내역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중에서도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34만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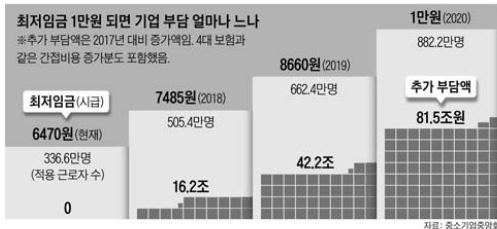
고용영향평가 강화	
일자리 우수기업 세제·정책금융 지원 확대	12개
실업급여, 지급기간 등 개선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단계적 축소	10개
영미마스터 육성과정 신설	
경찰부서관·생활안전 등 국가직 +10만명	7개
소방사회복지가축방역 등 지방직 +7.4만명	
사회서비스 분야 +34만명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30만명	
교수연구원 등의 혁신형 기술창업 활성화	6개
의료관광MICE문화교육 등 서비스산업 육성	19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 양극화 해소 등	6개
중앙-지방 간 일자리정책 연계를 강화	10개
정규직 채용 원칙, 예외적으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열거, 원하청 노동자 격차 완화	5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및 임금체불 근절방안	
주 52시간 근로 확립(연 1,800시간대 실현)	9개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임산·육아만 인정 → 가족돌봄·학업·훈련 등 확대	16개

7

1. 포용적 복지정책 : 최저임금과 보완책

최저임금 인상 → 실업률 상승 → 재정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2019년 8,350원, +10.9%)



저소득층 지원 대책 (2018.7)

-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3.19배)
- 기초연금 조기 인상 (하위 20%, 2019년부터 30만원)
-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청년구직활동비 지원 (월 50만원 6개월)

근로장려세제 개편안 (2018년)

	현행	개편안	확대 효과
합계	166만 가구 11,967억원	334만 가구 38,228억원	+168만 가구 △26,261억원
단독	69만 가구 2,797억원	169만 가구 14,641억원	+100만 가구 △11,844억원
홀벌이	85만 가구 7,860억원	130만 가구 18,652억원	+45만 가구 △10,792억원
맞벌이	12만 가구 1,310억원	35만 가구 4,935억원	+23만 가구 △3,625억원

8

1. 포용적 복지정책 : 현금성 복지급여

현금성 급여 중심의 복지 정책

기초연금 인상 (20만원-25만원-30만원- 40만원?)

현행	2018년	2018년 9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30만원	30만원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70%	소득하위 20%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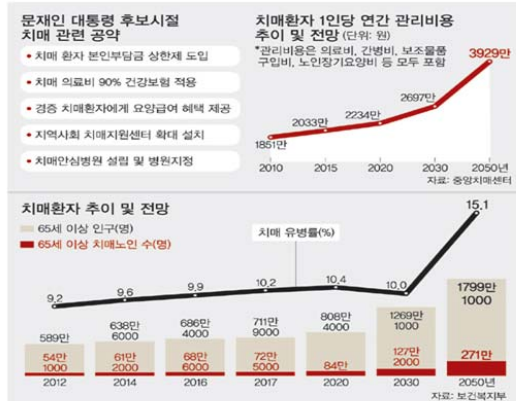
현금 지원 복지제도 확충 (2019년)

- 아동수당 지급 확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신설
- 실업부조제도 도입 추진

1.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대 ① 한부모 가족, 발달장애인 등 (0.15~0.3조원)	4. 고용안전망 강화 ①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지급액: 평균임금 50~80%, 기간: 90~240일 → 120~270일 ②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설 중위소득 120% 이하, 6개월간 월 50만원(10만명)
2. 저소득층 지원 강화 ① 기초연금 조기 인상 노인 소득 하위 20%(150만명) 월 30만원 지급 ② 생계급여 부양의무 기준 조기 완화	5. 저출산 대응 투자 확대 ① 만 6세 미만 아동에 아동수당 지급 (0.7~1.9조원) ②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지원금 지급 ③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및 사용시간(연 600~720시간) 확대
3. 소상공인 지원 강화 ①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지원 기준보수 인상(190~210만원) ②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1. 포용적 복지정책 : 무제한 국가책임

치매 국가 책임제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치매 국가책임제 부담도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부담 증가
- 치매안심센터 전국 시.군.구 단위로 설치 : 과잉 투자 우려

기초보장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자의 의무기준 폐지는 부양책임을 가족에서 국가로 이전
- 기준완화는 이미 지속적으로 하여 왔음
- 장해등급 폐지도 추진 중

< 연차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순서 >

구분	17.11월	19.1월	22.1월
부양의무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가구 (소득하위 70%)
수급자 가구	노인·중증장애인	모든 수급자 해당	모든 수급자 해당

- (재산기준 완화)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을 완화, 수급자 추가 보호(22.10월, 생계 2만명, 의료 4만명)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인상 등 효과 등으로 사각지대 대폭 감소 : 현재 93만명 → '20년 33~64만명(최대 60만명 ↓) → '22년 20~47만명(최대 73만명 ↓)까지 감소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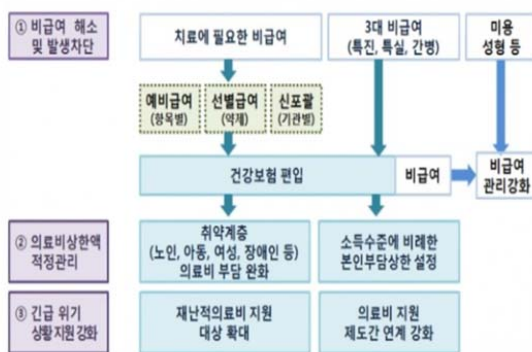


10

1. 포용적 복지정책 : 문재인 헬스케어

건강보험보장율을 현행 63% 수준에서 70%로 상향 목표

목표 :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 건강보험 비급여의 축소를 통하여 보장율 제고 모색
- 3대 비급여외에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
- 의료비 상한액 하향 조정, 긴급 위기 치료비 지원 강화 등

문재인 헬스케어의 추진

- 2018년~2019년4월 : 국민부담 2조 2천억원 경감
- 상급종합병원보장률 : 63.4%(16) → 65.6%(17) → 68.8%(18)
- 종합병원보장률 : 62.4%(16) → 63.8%(17) → 65.3%(18)

< 당초 발표된 계획 대비 추진 실적 >

구분	추진 현황	비고
① 비급여의 급여화	3대비급여 해소	선택진료비 폐지(18.1월)
	상급종합병원(2·3인실) 급여화(19)	추진중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22)	추진중
	초음파 급여화(21)	추진중
② 의료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MRI 급여화(21)	추진중
	동계·기존 비급여 급여화(22)	추진중
	치과·한방·약제(22)	추진중
	노인(치매검사 급여화, 중증치매·특니·임플란트 본인부담경감, 노인외래점액제 개선 등)	완료
③ 의료안전망 강화	아동(임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경감 등)	완료
	여성(검사, 마취, 약제 등 난임치료비용 보험적용)	완료
	장애인(모장구 급여 단계적 확대(22)	추진중
	소득 하위 50%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	완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대성자 확대(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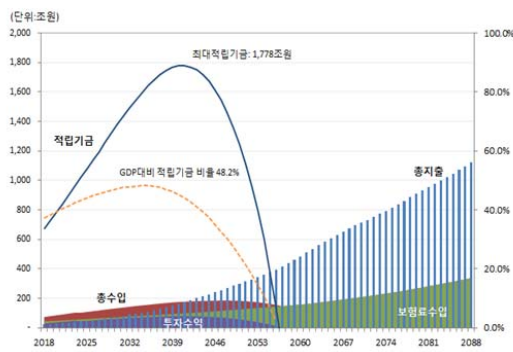
11

I. 포용적 복지정책 : 국민연금

재정여건은 악화, 보장성에 초점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진행 : 재정여건 악화

- 제4차 국민연금 재정재계산 결과
- 적립기금 소진연도 : 2060년 → 2050년대 후반
- 문재인 정부 연금급여율 50% 공약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 4개의 대안 모두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 대책 거의 없음
- 2안은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부담 가중
- 3안은 소득대체율 인상(5%p) + 연금보험료 인상(3%p) : 보험료 1% 대책
- 4안은 소득대체율 인상(10%p) + 연금보험료 인상(4%p)
- 3안과 4안의 적립기금 증가, 고갈연도 연장 대책은 미래세대 부담증가 귀결

정책조합 방안의 주요내용

	형평유지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
기초모형 (소득대체율)	국민 40% + 기초 12% [※] (52%)	국민 40% + 기초 15% [※] (55%)	국민 45% + 기초 12% (57%)	국민 50% + 기초 12% (62%)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28년까지 40%로 인상)	합병 유지 (28년까지 40%로 인상)	합병 유지 (28년까지 40%로 인상)	합병 유지 (28년까지 40%로 인상)
기초연금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 기초연금 강화방안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소득대체율은 '22년 AGI의 15%'로 계산
 ※ 기초연금 30만원은 '22년 국민연금 AGI의 약 12%'에 해당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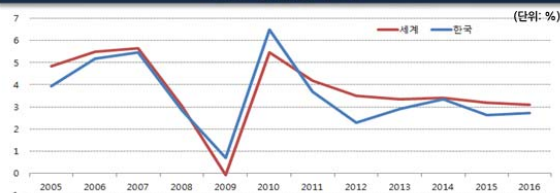
II.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1) : 성장률 둔화

한국경제 성장률 급속히 둔화

2019년 2020년 성장률 전망

	2017*	2018*	2019	2020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연간 3.1	연간 2.7	상반기 2.1 (0.4)	하반기 2.6 (0.8)
총소비	2.8	3.5	3.0	3.3
민간소비	2.6	2.8	2.1	2.3
총고정투자	8.6	-2.2	-5.4	-1.0
설비투자	14.6	-1.6	-10.1	0.8
건설투자	7.6	-4.0	-5.5	-3.2
저축재산생산물투자	3.0	1.9	2.4	2.9
총수출(물량)	1.9	4.2	-0.1	3.3
상품수출(물량)	3.8	4.0	-0.8	2.9
총수입(물량)	7.0	1.7	-4.2	2.1
상품수입(물량)	7.4	1.9	-5.1	1.9

GDP 성장률 추이



주: 미 달러 기준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6.10)

2019년 성장률 전망: 2.4%(KDI)

- 반도체 특수 소진
- 생산, 투자, 소비 후퇴 국면
- 저성장 국면 진입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

- 2005~2007년 : 낮음
- 2008~2010년 : 높음
- 2011년 이후 : 낮아짐

글로벌 무역 마찰 → 미중 패권전쟁

소득주도성장정책 실패 → 2019년 1분기 -0.4% (OECD 최하위)

13

II.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1) : 성장률 둔화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닮은 꼴

	GDP	물적자본	취업자수	TFP
1981~1990	9.4	5.0	1.5	3.6
1991~2000	6.7	4.1	0.9	1.9
2001~2010	4.3	2.0	0.7	1.6
2011~2020	3.2	1.2	0.7	1.4
2021~2030	2.6	1.1	0.0	1.5
2031~2040	1.6	0.7	-0.4	1.3
2041~2050	1.3	0.5	-0.5	1.3
2051~2060	1.1	0.5	-0.6	1.2
2061~2070	0.8	0.3	-0.8	1.2
2071~2080	1.0	0.4	-0.6	1.2
2081~2090	0.9	0.4	-0.7	1.2
2091~2100	0.8	0.3	-0.7	1.2

주: 1) 증가율 및 기여도는 10년 기간의 단순평균이므로, 요인별 기여도의 합과 조금 다를 수 있음.
2) 2015년 이전은 실적치에 기반한 성장회계 결과임.



- '80년대 9.4% 성장에서, 6.7%('90년대) → 4.3%('00년대) → 3.2%('10년대)
- '20년대 2.6%에서 1.6%('30년대) → 1.3%('40년대) → 1.1%('50년대)로 하향
- 물적자본, 취업자수, 총요소생산성 모두 감소
- 한국의 저성장은 일본의 저성장추세와 20년의 시차를 두고 답습
- '19년 2.4% 성장률 전망도 불안 → 구조적 저성장 + 경기 침체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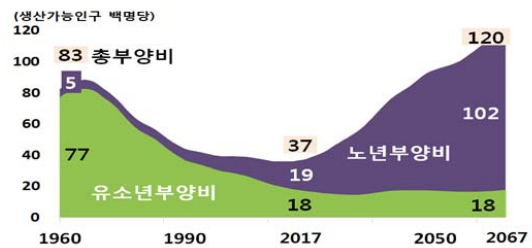
II.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2) : 저출산 ·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7년), 노년부양률 급상승, 합계출산율 1.0선 붕괴

통계청 신인구전망 (2019년)



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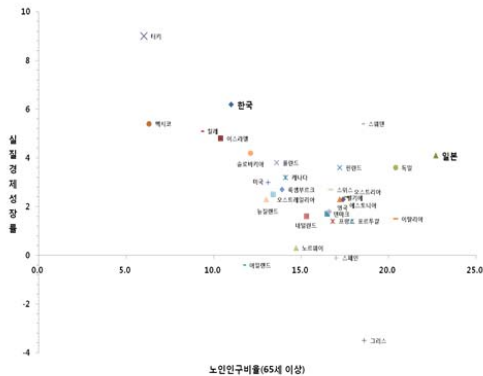
- 저출산의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구구조 급변 (통계청)
- 고학력화, 청년실업, 만혼화, 출산기피가 겹치면서 출산율 하락 (2018년 0.98)
- 25~45세 주력 생산연령층은 이미 감소 시작
-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년인구 부양부담 증가
- 안보 식량 지진 기후변화 등 각종의 거대위험 요소 증가

15

II. 지속가능성 제약요인 (2) : 저출산 ·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17년), 노년부양비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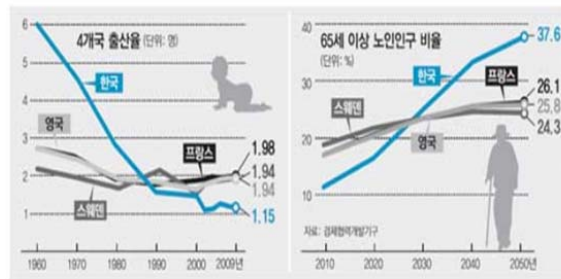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



- OECD 국가의 노인인구비율과 경제성장률의 관계를 보면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나라가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임. 인구총량보다도 인구구조가 중요함.

주요국의 노인인구비율과 출산률

- 저출산 현상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은 현재는 우리나라보다 고령화율이 높지만 2050년에 이르면 25% 내외의 노인인구비율을 유지
-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스웨덴, 영국, 프랑스 보다 낮아질 가능성 존재



16

II. 지속가능성 재정 점검 (1) : 총 자원 전망

총 투자 규모는 약 332.1조원 예상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총 투자규모

(단위 : 조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32.1	54.9	62.5	67.1	71.3	76.3
보편적 사회 안전망 구축	고용·교육	68.9	12.4	14.1	14.1	14.2
	소득	119.6	18.8	21.2	23.6	26.4
	건강	38.1	5.7	6.8	7.8	8.8
	사회서비스	105.5	18.0	20.4	21.6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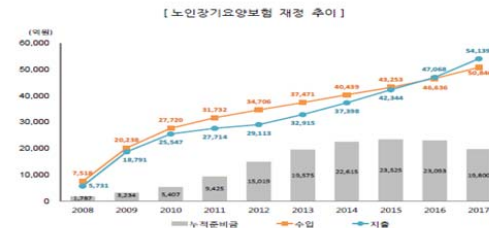
* 기본계획에 포함된 90이개 세부과제의 예산 포함(일반회계, 기금, 지방비 및 건보재정)

** 국민연금재정 등 일부 미반영 상태

*** 구체적인 투자계획 규모는 관계부처의 사업계획 구체화, 재정당국과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동가능

- 국민적 동의 등 여건 성숙 이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자원조달방안 검토 계획
- 단기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자료: 국민연금보험공단 자료원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결과: 2018~2027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수입(A)	6.1	7.4	8.1	8.9	9.6	10.4	11.3	12.2	13.1	13.8
지출(B)	6.6	7.6	8.5	9.3	10.3	11.4	12.5	13.7	14.9	16.4
재정수지(A-B)	-0.5	-0.2	-0.3	-0.4	-0.7	-1.1	-1.3	-1.5	-1.8	-2.6
누적준비금	1.4	1.3	1.0	0.6	-0.2	-1.2	-2.5	-4.0	-5.8	-8.4

주: 1.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곱하여 산출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9년 이후 8.51%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2. 국고지원금은 2018년은 예산금액, 2019년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 대비 18.32% 적용

3. 수가 인상은 2018년 11.34%, 2019년 5.36%, 2020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명목 임금인상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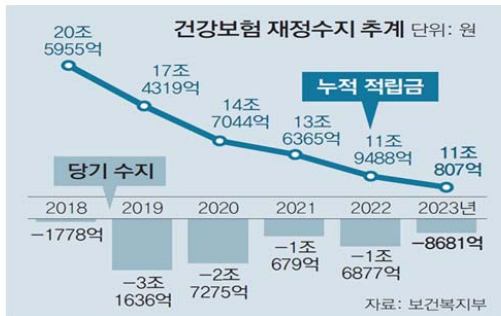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7

II. 지속가능성 재정 점검 (2) : 문재인 헬스 케어

목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 필요

문재인 헬스케어의 재원조달



- 정부 추산: 2023년까지 41.5조원 필요
- 건강보험료 매년 3% 인상, 적립금 11조원
- 정부 지원금 확대 (수입의 12%에서 17%) 미지수
- 가입자단체의 2020년 건강보험료 인상 거부 (3.9%)

문재인 헬스케어의 보장성 강화 가능성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 56%인 공공재원 비중을 64%로 확대해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료비는 연평균 7.5%씩 증가, 2016년 기준 125조원이던 국민의료비는 2022년에는 193조원으로 증가 예상.
이중 건강보험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104조원, 확보가능 최대 건강보험 수익(95.4조원)보다 많음.

	보장률	인상률	건보료 수입	국고지원금	국고지원금(%)	건강증진기금	수익 추계	적립금
현재_2015	6.07%	1.3%	44.3	5.6	12.6%	1.5	53.3	-
정부추산(2022)	7.39%	3.2%	63.6	10.8	17.0%	-	-	10
1) 보험료율 인상률								
(1) 최근 3년 평균	6.72%	1.3%	52.7	9.0	17.0%	1	62.7	10
(2) 중간값	7.06%	2.2%	58.2	9.9	17.0%	1	69.1	10
(3) 최근 10년 평균	7.39%	3.2%	63.6	10.8	17.0%	1	75.4	10
2) 국고지원금 비율								
(1) 최소: 현재수준	7.39%	3.2%	63.6	8.3	13.0%	1	72.9	10
(2) 발표	7.39%	3.2%	63.6	10.8	17.0%	1	75.4	10
(3) 최대: 현행법상	7.39%	3.2%	63.6	12.7	20.0%	1	77.3	10
3) 적립금 사용량								
(1) 최소	7.39%	3.2%	63.6	10.8	17.0%	1	75.4	5
(2) 발표	7.39%	3.2%	63.6	10.8	17.0%	1	75.4	10
(3) 최대	7.39%	3.2%	63.6	10.8	17.0%	1	75.4	20

자료제공: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18

II. 지속가능성 재정 점검 (3) : 문재인 헬스케어

보건의료 시장 질서와의 격돌

문재인 헬스케어와 의료계 반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하여 의료계 반발: 비급여 확대를 통하여 낮은 보험수가에 대응하여 왔기 때문
-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라 민영 실손의료보험은 반사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정부는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압박. 그러나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100% 넘는 것이 문제

문재인 헬스케어와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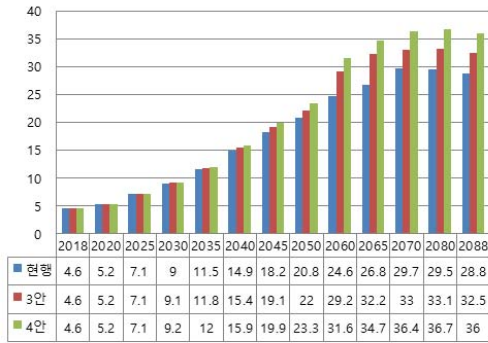


- 1) 발생손해액/보험료
- 2) (발생손해액+실제사입비)/(보험료+부가보험료)

19

II. 지속가능성 부문별 점검 (4) : 국민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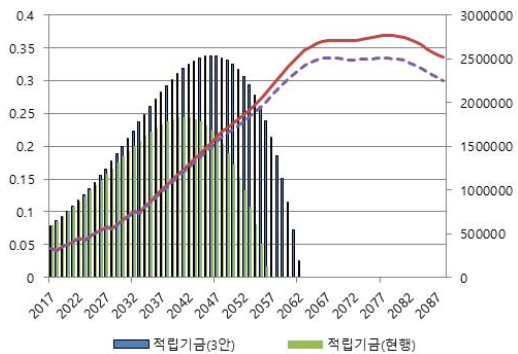
국민연금 정부개선의 문제점



-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연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 장기적으로 9% → 17%로 조정 필요
- 연금수급개시연령 단계적 상향 조정 (65세→68세)
- 연금급여율 인상을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인상 필요

신 인구추계와 정부개선 3안 재정전망

- ✓ 2063년 적립기금 소진
- ✓ 부과방식보험료율 : 2063년 34.6%, 2080년 36.8%
- ✓ 부과방식보험료율이 2017년 인구추계 대비 3%p 상승



20

II. 지속가능성 부문별 점검 (5)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급상승

실업급여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7 결산	2018 추경(A)	2019 계획안(B)	연년대비 (B-A)	증감률
실업급여	52,425	62,962	76,247	13,285	21.1
구직급여	50,248	61,572	74,093	12,521	20.3
구직급여(순수)	50,226	61,544	74,065	12,521	20.3
출원연장급여	0.5	0.4	0.5	0.1	18.4
개발연장급여	22	28	28	0.03	0.1
조기재취업수당	2,143	1,354	2,102	747	55.2
조기재취업수당(순수)	2,143	1,354	2,102	747	55.2
직업능력개발수당	0.02	0.05	0.02	-0.03	-60.0
광역구직활동지원금	2.4	2.7	2.7	-0.02	-0.7
광역구직활동비	0.003	0.004	0.004	-	0.0
이주비	2.4	2.7	2.7	-0.02	-0.7
지역별실업급여	32	33	49	16	50.2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비 현황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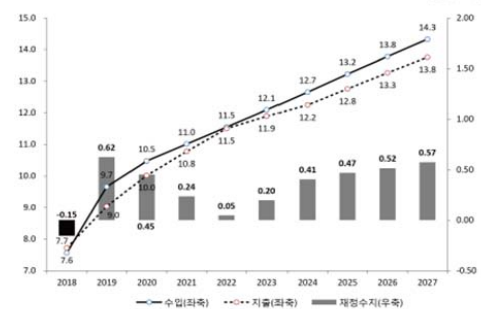
구분	2017 결산	2018 추경(A)	2019 계획안(B)	연년대비 (B-A)	증감률
모성보호육아지원	9,356	13,111	14,553	1,442	11.0
출산후휴가 급여	2,426	2,985	2,604	-381	-12.8
유산사산휴가 급여	8	8	8	0.2	1.8
육아휴직 급여	6,804	9,886	11,388	1,503	15.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18	232	349	117	50.6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	203	203	(신규)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보장성 확대 → 고용보험료율 인상

- ✓ 구직급여 소정급여 일수 30일 연장
- ✓ 구직급여 상한 : 평균임금 60% 수준으로 10%P ▲
-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소득대체율 40% → 50%,
월 상하한액 70만원~120만원 (20만원 ▲)
- ✓ 고용보험료율 인상해야 (1.3% → 1.6%) 재정수지 균형

< 고용보험기금 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지출 및 재정수지 전망: 2018~2027년 > (단위: 조원)



21

II. 지속가능성 재정 여건 (1) 슈퍼예산, 국가채무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 조세부담률 20.4%, 국민부담률 28.6% (2022년)

2019년 국가예산 9.7% 증가

	'18년 예산		'19년 예산안 (B)	증감 (B-A)	%
	본예산(A)	추경			
◇ 총지출	428.8	432.7	470.5	41.7	9.7
· 예 산	296.2	298.0	327.3	31.1	10.5
· 기 금	132.6	134.7	143.2	10.6	8.0
◇ 총수입	447.2	447.7	481.3	34.1	7.6
· 예 산	294.8	295.3	325.9	31.1	10.5
· 국세수입	268.1	268.1	299.3	31.2	11.6
· 기 금	152.4	152.4	155.4	3.0	2.0

2018-2022년 조세부담률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조세부담률	19.2	20.3	20.4	20.4	20.4
■ 국민부담률	26.6	27.8	28.1	28.3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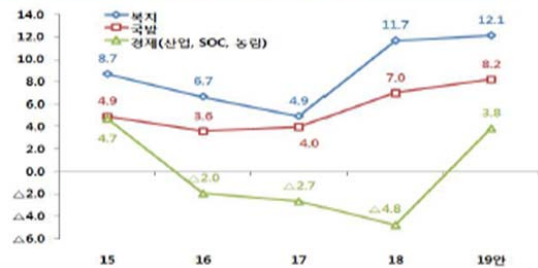
· 국회 확정예산 기준

2018-2022년 중기 재정계획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28.5 (△1.6)	△33.4 (△1.8)	△44.5 (△2.3)	△54.2 (△2.6)	△63.0 (△2.9)
※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18.3 (1.0)	10.8 (0.6)	△0.5 (△0.03)	△10.5 (△0.5)	△19.8 (△0.9)
■ 국가채무 (GDP대비, %)	708.2 (39.5)	741.0 (39.4)	790.8 (40.2)	843.0 (40.9)	897.8 (41.6)

· 본예산 국회 확정기준

부문별 국가예산 증가율



22

II. 지속가능성 재정 여건 (2) : 장기적 재원조달 위기

국회 예산정책처 전망 : 복지분야 의무지출 → GDP 대비 17.4% (2050년)

항목	세부내역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공적 연금	국민연금	106.8 (5.7)	118.9 (6.2)	155.3 (7.5)	262.7 (8.9)	347.7 (10.4)	3.9
	사학연금	23.0	27.7	59.7	106.0	159.8	6.4
	공무원연금	3.4	3.9	6.1	7.8	9.9	3.5
	공무원연금	16.9	19.2	28.6	37.5	49.3	3.5
	군인연금	3.4	3.6	4.7	5.8	6.8	2.3
소 계		46.7	54.5	99.1	157.2	225.8	5.2
사회 보장	건강보험	8.7	9.8	16.1	21.6	27.3	3.7
	노인장기요양보험	1.0	1.1	2.4	4.6	7.3	6.5
	고용보험	8.9	10.1	13.2	14.2	15.3	1.8
	산재보험	5.1	5.1	6.8	8.5	10.0	2.2
소 계		23.7	26.2	38.5	48.9	59.9	3.0

- 국민연금 증가율 : 6.4% (연평균)
- 건강보험 증가율 : 3.7% (연평균), 건강보험은 정부 재정지원 부문만 반영됨.
건강보험 총재정지출은 229조원('50)
- 노인장기요양보험 증가율: 6.5% (연평균).
노인장기요양보험 총재정지출은 39.7조원 ('50)
- 총복지지출은 581.8조원 예상 (GDP 대비 17.4%)

항목	세부내역	2019	2020	2030	2040	2050	연평균 증가율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12.0	12.5	17.0	21.2	24.6	2.3
	기초연금	11.5	12.1	19.3	25.4	28.0	2.9
	영유아보육	3.4	3.0	3.3	2.7	2.4	-1.1
	아동수당	2.2	2.4	1.9	1.5	1.1	-2.2
	장애인연금	0.1	0.1	0.1	0.1	0.1	1.9
소 계		29.8	30.9	42.3	51.5	56.7	2.1
복지 분야 기타	보훈	4.6	4.4	3.2	2.8	3.1	-1.2
	기타 복지	2.0	2.9	2.2	2.2	2.3	0.3
	소 계	6.6	7.3	5.4	5.0	5.4	-0.7
복지분야 의무지출 대비 비율							평균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43.7)	(45.8)	(53.5)	(59.8)	(64.9)	(56.0)
	사학연금	(22.2)	(22.0)	(20.8)	(18.6)	(17.2)	(19.7)
	공공부조	(27.9)	(26.0)	(22.8)	(19.6)	(16.3)	(21.4)
복지분야 기타		(6.2)	(6.2)	(2.9)	(1.9)	(1.6)	(2.9)

주: 1. 전망액은 2019년 물인가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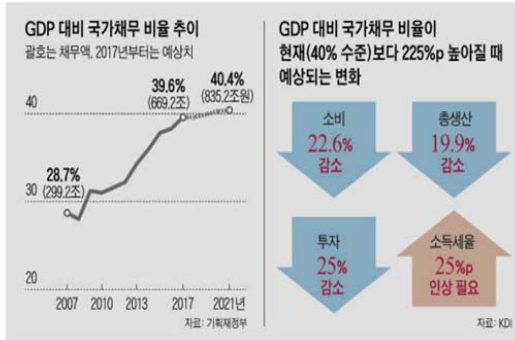
2. 전망액이 물인가격인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경상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복지재정 지출 증가
- 사회보험 중심으로 재정지출 증가
- 기초연금 등 사회수당 증가

23

II. 지속가능성 재정 여건 (3) : 장기적 자원 조달 위기

증세없는 복지 확대는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



- 복지지출의 빠른 증가 등으로 국가채무도 증가 전망
- 국가채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빠르게 증가
- 증세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
-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잠재적인 부채인 연금채무의 빠르게 증가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아직 낮은 편
- 인구고령화 등으로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
- 현 제도하에서도 2060년경 GDP 29% 지출 전망 (스웨덴 복지수준이 되지만, 노인인구비율의 차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중 복지 수준)
- GDP 30% 수준이 한계점 : 비용효과적 복지 절실



24

III.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1 사회보장 재정 총체적 점검 필요

▶ 연금보험 재정 불안 요소 잠재

- 국민연금 장기재정 불안 가속화
-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효과 감소, 군인연금 제도 개편 지연
- 사학연금 장기재정 불안 요소

▶ 건강보험 등 보험 재정 불안 증가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
- 고용보험 급여 지출의 빠른 증가
-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 보장

25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2

BIG 정부 V.S. SMALL 정부 : 재정건전성은 강화 필요

▶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세계는 BIG 정부 쪽으로 선회

- 정부지출이 늘어나고 정부규제가 강화
- 선진각국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증가

▶ 어떠한 방향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은 강화되어야 함

- 각국의 양적 확대 정책 혹은 세출 확대로의 선회 등 동향 주시
- 새로운 재정지출 소요의 효과적인 통제 필요
 - ▶ 양출제입이 아닌 양입제출로 전환 필요
 - ▶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현 수준을 유지해야

26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3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재정적 측면 통제 필요

▶ 국민연금 재정 흑자와 정부 재정 적자

- 2018년 연금보험료 수입은 44.4조원, 급여지출은 21.4조원
23조원의 시중 자금을 Crowding-out
-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 재정흑자로 균형시키는 형국
반면에 가계순저축률은 6.9%, 가계의 가처분소득증가율 : 0.5% 감소

▶ 사회보험료 부과는 사실상의 소득세 부과

-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지출이 급속히 증가
- 조세부담률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률은 급속 증가

▶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중기재정 계획 수립 및 관리 필요성

27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4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를 '완전고용' 중심으로 전환

▶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필요

- 경제개발 예산의 지출항목을 고용증진부문에 중점 확대
 - 직접적인 일자리 만들기 예산 보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 강화와 비경쟁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를 동시에 감안한 정부 투자 확대
 - 국민들은 경제성장 혹은 복지증진 보다는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
 -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등은 신중한 추진 필요
 -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투자형 공공부문에 대한 고용은 확대
 -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여건과 환경조성 부문에 투입

28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5

국가부채 종합관리

▶ 최근 국가부채의 규모의 관리가 핵심

- 국가부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원칙
 - 공무원연금 등 국가책임 연금에 대한 발생주의 회계 적용
 - 공기업 등 최종책임 주체가 국가인 부채 산입
 - 지방정부와 지방공사의 부채 산입
-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복지지출의 확대는 불가피
 - 일본 반면교사: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채무의 연계고리 차단 필요
- 복지지출의 확대에 필요한 재원은 증세를 기본으로 해야 함

29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6 잠재적 국민부담률 관리 필요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 국가의 재원조달 행위는 다각화 되고 있음
- 명시적인 조세부담률 외에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 고려해야
국민의 체감 부담을 관리할 수 있음
- 정부의 미래의 부담전가 행위의 통제를 위해서는 재정적자 관리 필요

▶ 사회보험료 vs 조세

- 국가의 책임 영역 (Anti-Poverty) → 조세
- 국민의 책임 영역 (Income Protection) → 사회보험료
-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지원 원칙 수립 필요 → 사회보험료 지원 재검토

30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사회보장 재정기준 정립

7 새로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현 사회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복지지출 비중은 30% 접근

- 현재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으로는 한계
- 실현 가능한 재원조달 대책 수립 필요
- 세출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대안

▶ 새로운 재원 방안 필요하나 국민설득의 어려움

- 현재 기업의 세부담 (법인세 등)은 선진외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
- 노동소득 분배율은 상승하고 있으나 취업자수 감소로 추가부담 능력 제한
- 소비세 등은 경제적 왜곡은 적으나 단기적으로 경기에 악 영향

31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고령화 저출산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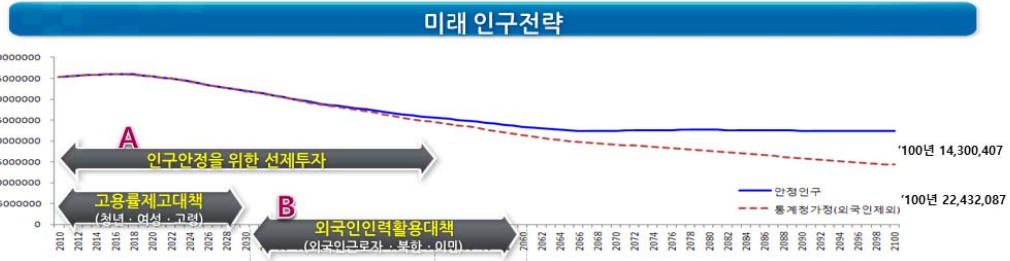
1) 단계별 인구관리 정책

● 인구 변동기에의 체계적 대응 (기간별 탄력적 적응)

- 안정인구의 생산가능인구와 최근 출산수준 유지시 생산가능인구 간의 차이는 초기에 크지않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빠르게 커지는 추세
 - '30년 20만명, '40년 118만명, '50년 197만명, '60년 275만명, '70년 405만명, '100년 603만명 등 증가폭 상승

● 생산가능인구의 갭이 시기별로 다르므로 인구변동 대응전략은 구간별로 다르게 설정 필요

- '30년까지 총량적 생산가능인구의 차이는 미세하므로 노동력 수급은 청년층의 구조적 실업(mismatching) 해소, 여성고용률 제고, 퇴직고령자 활용 등 국내인력으로 충분히 대처 가능할 것으로 판단
- '30년 이후부터 인구가 안정기에 접어드는 '50년대 후반까지 기존인력활용으로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안 필요
 - (A) : 지금부터 태어난 인구가 '3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층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출산율을 '50년까지 인구 대체 수준으로 높여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2,000만명 수준에서 유지토록 적극적이고 선제적 인구투자 정책 필요
 - (B) : 출산율이 단기간에 2.1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외국인인력과 북한인력의 활용대책을 보완적으로 추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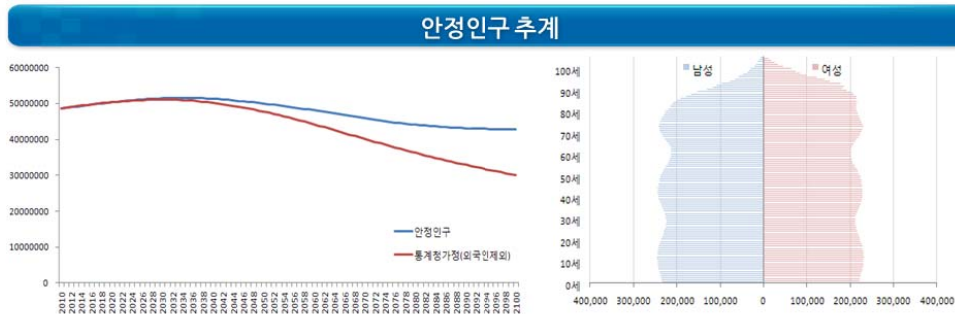
32

Ⅲ.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고령화 저출산 대응

2) 안정인구 도출

● 인구 유지가 가능한 합계출산율인 2.1명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인구 고령화 대처 가능

- 출산율이 2.1이 된다 하더라도 한국 인구는 4,300만 명선으로 수렴될 전망
 - * 4,300만 명은 88올림픽 직후 고도성장기인 1989년 인구규모(4,307만 명)로서 수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고령사회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저출산 대응은 선제투자적 성격
 - * 노인인구비율도 약 30% 수준으로 점차 하향 수렴 (최대 37.1%)
 - * 인구구성도 역 피라미드형에서 장방형구조로 전환 (현재 스웨덴, 프랑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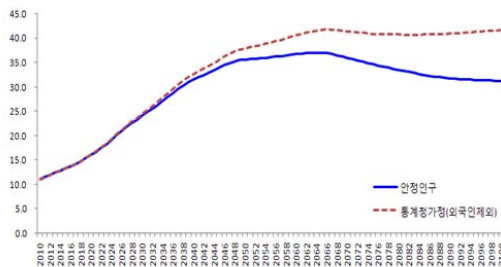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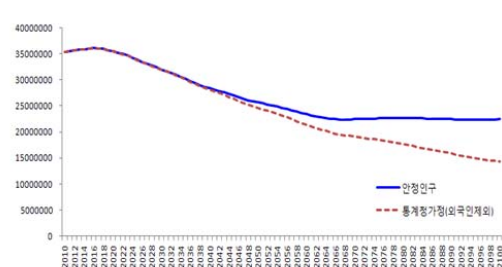
III.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고령화 저출산 대응

- 안정인구 경로는 '10년 4,852만에서 '34년 5,158만명으로 정점에 도달 후
'50년 5,001만 → '75년 4,486만 → '100년경부터 약 4,300만명(4,285만) 수준에서 안정
- 기존의 인구구조로 인해 인구대체출산율 도달 후 인구안정화에 50년 소요
- 안정인구 규모는 2100년 기준으로 최근 출산율 유지 시(통계청 가정, '10년 1.23 → '35년 이후 1.42 유지)의 3,013만 명에 비해 각각 약 1,300만 명 차이
- * 안정인구의 고령화 수준은 '50년 35.6%로 최근 출산수준 유지 시 37.4%와 큰 차이가 없으나,
안정화되는 '100년경에는 31.3%로 다른 인구의 고령화수준 42.3%에 비해 큰 차이(10% 포인트) 발생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



생산가능인구 (15~64세)



34

III.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 고령화 저출산 대응

● 출산정책 : 기본방향

- 정책수준 UPGRADE(사각지대 해소, 국민체감도 제고 등) ➡ 결혼지원, 보육책임 강화
- 양성평등제고 ➡ 일과 생활 균형
- 다양한 가정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 보육지원 체계 개편 보완 ➡ 방과후 아동 전문 돌봄 서비스로 전환 (동일 예산으로 연봉 3천만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가능)



보육 지원

- 보육 사각지대 해소
- 민간보육서비스 질 제고
- 근로와 보육서비스 간 연계 강화
- 확립화된 보육비용 지원구조 개선



결혼 지원

- 취업준비기간 단축
- 결혼비용 부담 경감
-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다양한가정 지원



- 이혼가정 자녀 양육 책임 강화
- 다문화 가정에 대한 포괄적 지원

출산은 목표가
아닌 결과 지표

일-생활 균형

- 지자체·공공기관 모니터링 체계 도입
- 육아 휴직 급여 개선



35

1. 중기재정 전망

- 포용적 복지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궁극적으로 재정과 직결됨으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9년의 통합재정수지는 10.8조원 흑자로 계획되어 있음. 그러나 정부의 순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는 GDP의 1.8%인 33.4조의 적자.
- 2018 - 22년간 관리재정수지는 모두 적자이며, 통합재정수지 조차도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전망.
- 발표에서는 이를 정부재정의 적자를 국민연금의 흑자로 균형 시키는 형국이라고 지적. 이는 미래에 지출해야 할 돈을 지금 앞당겨 끌어다 쓰는 것이며, 결국 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고, 국가의 채무(부채)를 증가시킬 것임.
- 정부의 재정지출시 지출 근거와 요건이 법령에 명시되어 예산 편성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직성 지출인 의무지출이 전체 재정지출의 50%를 넘고 2018-22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7.8%에 달하고 있음.
- 중기 재정전망을 발표할 때 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과 대GDP 적자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지 마저도 2020년부터 적자로 반전될 전망. 앞으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음.

(표 1)

중기 재정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재정수입 ¹⁾	447.7	481.3	504.1	525.4	547.8	5.2
◦국세수입	268.1	299.3	312.7	325.7	340.3	6.1
◦세외수입	27.2	26.6	27.5	28.4	29.0	2.1
◦기금수입	152.4	155.4	163.9	171.3	178.5	4.0
재정지출 ²⁾	428.8	470.5	504.6	535.9	567.6	7.3
◦의무지출	217.0	241.7	256.4	273.6	292.9	7.8
◦재량지출	211.9	228.8	248.3	262.3	274.7	6.7
관리재정수지	△28.5	△33.4	△44.5	△54.2	△63.0	-
(GDP대비,%)	△1.6	△1.8	△2.3	△2.6	△2.9	-
통합재정수지	18.3	10.8	△0.5	△10.5	△19.8	-
(GDP대비,%)	(1.0)	(0.6)	(△0.03)	(△0.5)	(△0.9)	-
국가채무	708.2	741.0	790.8	843.0	897.8	-
(GDP대비,%)	(39.5)	(39.4)	(40.2)	(40.9)	(41.6)	-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2) 본예산 국회확정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2018년도 예산안, 2018 ~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 8. 28)

<참고>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 조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관리 재정 수지	16-20년 계획	△39.1 ¹⁾ (△2.4)	△28.1 (△1.7)	△25.0 (△1.4)	△23.2 (△1.2)	△20.4 (△1.0)	-	-
	17-21년계획	-	△28.3 (△1.7)	△28.6 (△1.6)	△33.0 (△1.8)	△38.4 (△2.0)	△44.4 (△2.1)	-
	18-22년 계획	-	-	△28.5 (△1.6)	△33.4 (△1.8)	△44.5 (△2.3)	△54.2 (△2.6)	△63.0 (△2.9)
통합 재정 수지	16-20년 계획	2.4 ¹⁾ (0.1)	13.8 (0.8)	21.7 (1.2)	27.9 (△1.5)	33.4 (1.7)	-	-
	17-21년계획 ²⁾	-	13.0 ¹⁾	18.1	18.1	15.3	12.6	-
	18-22년 계획	-	-	18.3 (1.0)	10.8 (0.6)	△0.5 (△0.03)	△10.5 (△0.5)	△19.8 (△0.9)

주 1) 추경안 기준

2) (재정수입-재정지출)로 계산해서 삽입

자료 : 기획재정부 각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2. 분야별 자원 배분

- 보건·복지·노동부문의 예산이 압도적 비중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의 경우는 총지출470.5조의 34.5%인 162.2조원(전년대비 12.1% 증가)임
-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복지부문 지출은 계속 증가할 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분야별 자원 배분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17	2018(A)	2019(안)(B)	증감율(B/A,%)
◆총지출	400.5	428.8	470.5	9.7
1. 보건·복지·노동	129.5	144.6	162.2	12.1
(*일자리)	(17.1)	(19.2)	(23.5)	(22.0)
2. 교육	57.4	64.2	70.9	10.5
...				
5. R&D	19.5	19.7	20.4	3.7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6.3	18.6	14.3
7. SOC	22.1	19.0	18.5	△2.3
8. 농림·수산·식품	19.6	19.7	19.9	1.1
9. 국방	40.3	43.2	46.7	8.2

자료 : 기획재정부 각년도 예산안

3. 포용적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정책을 재정이 지속적으로 감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관리재정수지는 물론 통합재정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
 - 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저출산과 고령화, 복지욕구의 증대, 국제 무역 갈등(미·중, 한·일 등) 등 난제가 산적해 있어 향후 여건의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움.
 - 증세 없이는 복지 확대가 불가능하며, 증세는 복지 재원 확보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실행이 가능한데, 증세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임.
 - 일각에서는 국제비교를 하면서 재정지출 여력이 있을 때 경기하강국면에 대비하여 확대재정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건전성 기준은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또 재정승수가 높지 않고 효과도 시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복지비용의 증대로 국가채무가 증대(미래세대의 부담)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 국가 간 비교지표로 활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는 2017년 기준 42.5%로 OECD 29개국 중 8위, 사회보장지출이 많은 스위스(42.9%), 노르웨이(43%)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였음.
 - 또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6조원으로 GDP 대비 60.4%에 이르고 있음.
(*최종적인 부채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됨. 또 일반정부와 비금융공기업간의 비율이 <66% : 34%>로 비금융공기업 비율이 가장 높음)
 - 작년 12월 KDI가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 ‘국가 채무속도를 제어해야한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함.
- 지난 5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언급한 40% 적정국가채무비율 논쟁은 결국 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채무의 증대와 직결되는 문제임.
 - 재정에서 양출제입(量出制入) 아니라 양입제출(量入制出)로의 전환이 필요
-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 경제관련부문(산업, SOC, 농림·수산 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 미래의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근원적 대비가 지금 필요함.
 -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도 민간부문(기업)에서 창출되도록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함.
- 포용적 복지정책의 성과와 문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나, 기대하기가 어려운듯함.
-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겠지만,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될 것임. 만약 정치일정을 고려한 선심성(?) 복지지출의 확대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포퓰리즘적 복지확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몇몇 외국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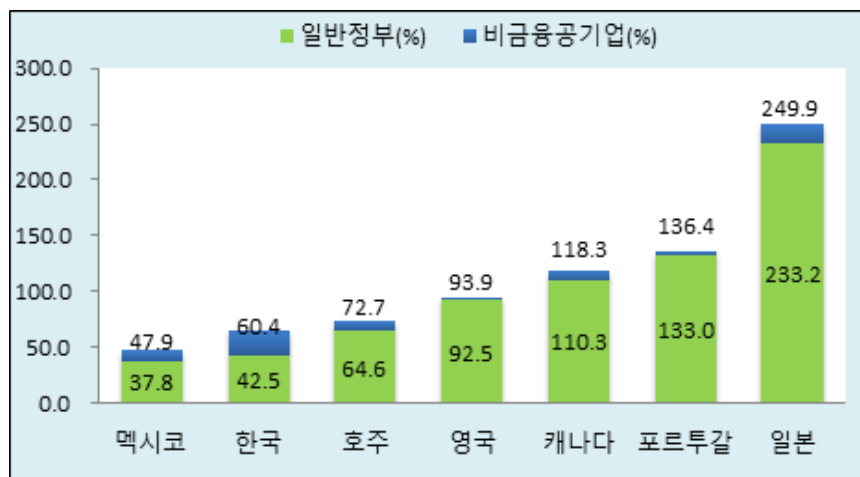
(첨부)

공공부문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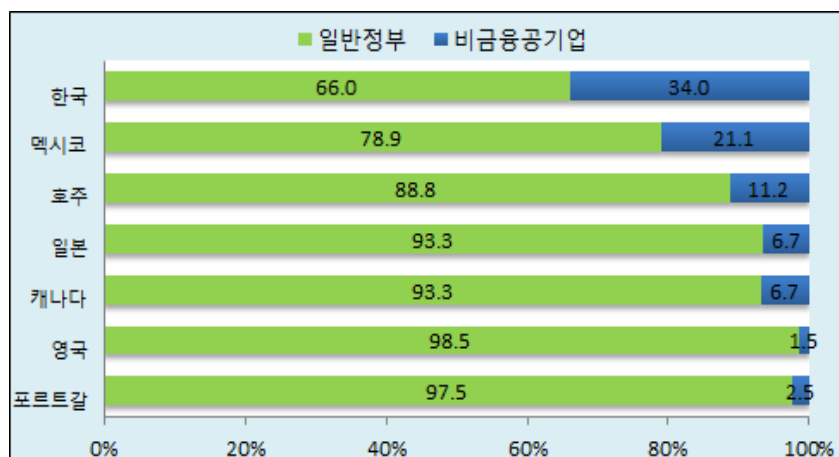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규모	GDP 대비
◆ 공공부문(D3)	898.7	62.9	957.3	64.4	1003.5	64.2	1,036.6	63.1	1,044.6	60.4
▪ 일반정부(D2)	565.6	39.6	620.6	41.8	676.2	43.2	717.5	43.7	735.2	42.5
▪ 비금융공기업	406.5	28.4	408.5	27.5	398.9	25.5	386.4	23.5	378.5	21.9
- 중앙공기업	362.0	25.3	366.3	24.6	358.2	22.9	350.9	21.4	345.8	20.0
- 지방공기업	50.9	3.6	49.4	3.3	47.7	3.1	43.6	2.7	41.2	2.4

주요국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비중(%)

주요국 GDP 대비 부채비율(%)



주요국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비중(%)



자료 : 기획재정부, 2017년도 일반정부부채 및 공공부문부채(2018. 12)

1. 들어가며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인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모든 국민이 경제성장의 이익을 골고루 누리고 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교육, 소득, 건강, 서비스 등의 분야별로 5년 후에 달라지는 국민생활의 목표를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국가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시점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토론의 장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토론에 앞서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잘 발제해 주신 김용하 교수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포용적 복지정책의 목표와 기본 방향,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적 재정문제, 세대 내외의 원칙과 대응전략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제고 방향을 정리해주셔서 토론자 입장에서 보다 명료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2.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

김용하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복지정책은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및 복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의 인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기초생활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기대치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먼저 아동수당 도입에 대해 살펴보면,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추진 요구와 필요성은 강조되었으나, 재정 투입 대비 불투명한 효과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미루어져 왔다. 그러나 저출산이 장기화되고 아동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난 해 9월부터 도입되었다. 처음 도입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되었으나,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을 위하여 2019년 4월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OECD 36개 회원국 중 32개국에서 이미 도입되어 보편적 방식으로 모든 아동에게 적용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며, 아동이 부모 등 보호자에게 종속되지 않게 해 아동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보장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수당과 함께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도 도입 시 소득기준에 따라 10만 ~ 20만원 정도를 지급하였던 것을 소득하위 20% 대상 30만원으로 인상되어 공적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노인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 전 생애를 아우르는 포용국가의 기본생활 보장체계가 한창 두터워지게 되었다. 이는 지속

적인 재원확충으로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요구됨을 의미한다.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과 함께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포용적 복지정책 중 국가의 책임성 측면에서 중요한 현안으로서 대두되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적부조와 사적 부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위해 2019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20세 이하의 1~3급의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빈곤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확충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단계적 폐지가 아닌 즉각 폐지 요구도 있는 반면, 탈수급 유인 감소, 부정 수급 등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취지를 제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보편적 복지의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지속가능성 제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제약 요인으로서 성장률 둔화, 저출산 및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고방안은 국가채무 증가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주요 OECD 국가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복지지출 확대와 국가 채무의 연결 고리를 선제적 차단할 수 있는 필요성에 따라 복지 재원의 증세를 기본적 대안으로 제언하는 바다. 조세부담, 사회보장부담, 지자체 비용부담이 국가와 국민 및 지방정부의 책임영역으로 해석되며,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의 물꼬를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이 주요한 담론으로 논의되고 있다.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 노인인구의 증가로 발생하는 노년 부양비가 급증하는 현상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8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은 평균 72.5세로 나타나 생산가능 인구(15~64세)와 노인(65세 이상)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올해 1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보장의 확대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진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재정·경제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슈는 정치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라서기가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아주 예민한 이슈이고, 일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무조건 담보되는 것도 아니며, 별 성과

도 없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18년에 전체인구의 14.3%가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 노동시장은 정년 60세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정부 재정사업에 힘입은 일자리로 노인층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경제, 사회, 복지 등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5%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린 판결과 맞물려 복지혜택과 공적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겠다는 방안이 함께 논의 중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법원의 가동연한 65세 선고와는 무관하다. 우리 노동시장은 현실적으로 55세 전후부터 실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박탈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최저생계비가 63만원인 반면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쳐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나 연금 등을 통하여 얻어지지만, 노인들의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근로소득은 열악한 상태이며, 산업화로 인하여 점차 노인대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의 노인 일자리는 고령노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 보장 제도가 공적 노령연금이지만 그 금액이 매우 적은 편이라 최저 생활 보장에는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여성노인의 경우, 노년기에 겪게 되는 소득감소와 신체적 질병문제가 더 심각하며,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 정도 더 길고, 연금을 받는 여성노인은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은 대부분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고 노인 연령기준만 상향하는 것은 한국의 사회적 안전망에 문제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빈곤층 노인에 대한 안전망을 준비하여 충격을 흡수할 정책적 지원 체계부터 마련해야 하며, 여성노인의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 관련 정책은 성인지적 관점과 장기적 관점에서 별도로 심도 있게 연구하여 초고령화 해법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연령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학술적 차원을 넘어 현실의 것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65세가 노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보통 65세 이상이 되면 노화현상으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며, 노인의 연령 기준을 65세 기준으로 노인의 연령에 따른 분류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65-69세를 초기 노인, 70-80세를 중기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해서 각각의 노인 인구에 대해 경제사회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고령화 저출산 대응을 통한 단계별 인구관리 정책을 지속가능성의 제고방안으로 제시한 김용하교수님은 출산정책의 기본 방향을 보육지원, 다양한 가정지원, 결혼지원, 일과 생활의 균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첨언하여 안정인구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2019년 현재 150만명에 육박한 다문화 가정의 국내 이주민에 대한 가족복지 정책과 함께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이민하고 있는 해외 이민자에 대한 역이민정책을 토대로 한 국내 인구유지 정책을 통하여 인구 고령화, 노동 생산연령 인구의 적절 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도모할 것을 제언한다.

포용적 복지의 재정적 한계 극복이 중요

한국은 복지제도가 미약한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지 제도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국가다.

현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아동수당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한국형 실업부조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국민연금 소득보장, 치매국가책임제 등 굵직한 복지대책을 제시했다. 필연적으로 가야할 복지국가의 모습이라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일시에 쏟아놓은 복지 확대로 인해 재정 마련의 어려움과 각종의 이해 단체의 정책 수용 반발을 경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갯간’을 생각하지않고 복지 정책 확대만 내세우다 보니 오히려 좌초 내지는 후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암초로 등장하는 첫번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돈 낼 사람은 줄어 들고 복지 혜택을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그런 인구 구조다. 포용적 복지 제도 지속가능성에 불안을 더 해주고 있는 가장 큰 요소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하는 복지재정 확대가 현 정권 임기내에만 맞춰져 있어 차기 정권에서 재정 부담이 얼마나 가중될 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큰 틀에서 현 정부가 제시하는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중간 점검 필요성이 더 커지는 이유다. 복지비용 지출은 세대간은 물론 세대내 균형을 잡아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구조 문제

저출산의 와중에서 가중되는 젊은이의 취업난 해결이 급선무이다. 현재 2021년까지 취업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같이 취업인구 증가는 일시적 인구 증가현상이다.

더 큰 문제는 고령화로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베이비부머들의 존재다. 정년 연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대 인구를 가진 베이비부머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쉽지 않다.

더욱이 돈 낼 사람은 줄어들고 혜택 받을 사람만 늘어나는 인구 구조에서 정년 연장은 필수적인 해결책이다. 정년 연장은 하되, 몇 살까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다.

건강보험 보장성확대와 건보재정 마련방안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국민들에게 그나마 가장 큰 호응을 받는 복지 확대 정책이다.

현 정부가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존의 유례없던 건보재정 20조원을 이용해 과감하게 재정 확대를 내세울 여건을 갖췄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기존 재원 20조원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달치 정도에 불과. 결국 재원 마련 위해서는 건보료 인상과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가 필수.

건보료 인상은 필수이고,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적 조치이다. 하지만 급격한 건보

료 인상이 필요

경기침체 상태에서 올해부터는 전체 국민 직장가입자의 평균 임금인상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건보료를 인상 시도.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얇아진다는 비판에 직면한 반면 정부의 국고지원은 날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 정부는 전체 건보 예상 지출액의 13.6%를 지원하겠다는 방침. 하지만 국고지원율이 낮아 국민들의 건보료 부담이 날로 커져 보장성 확대와 건보료인상은 실손보험 가입 둔화와 보험료를 인하가 초점이다. 그러나 실손 보험에 대한 정부 통제는 미진한 상태

기초연금 확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지원액 확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대하고, 앞으로 40만원으로 올릴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지원액 증액의 걸림돌은 노인 숫자의 급격한 증가다. 현재 전체 노인의 70%인 520만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정권말인 2021년에는 590만명으로 늘어난다. 차기 정권말에는 77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액은 현재 14조원에서 이번 정권말인 2021년에는 21조원, 2026년 26조원으로 경증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70%가 아니라 노인 빈곤을 해소 수준인 50%로 낮춰 지원금을 더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은 이미 2000년대 들어와 모든 정권의 필수 개혁 과제로 꼽힌다. 특히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연금 개혁 목소리는 높아진다.

-국민연금 개혁은 뒤로 미룰수록 후세대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2대 과제는 미약한 보장성과 보험료 인상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이 44.5%이다. 내년이면 44%로 또 다시 떨어진다. 후세대의 받는 돈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적자 해소문제다. 특수직역 연금은 적자분이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이를 그대로 둔채 국민들에게 돈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대한 연금개혁은 총체적으로 할 때 해결할 길이 보일 수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

-저출산 문제에서 걸림돌이 육아휴직이다. 이 같은 문제의 누적이 저출산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됐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된다고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 가능한 사회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 육아휴직은 단순히 여성 근로자의 문제만 아니다. 남성 근로자들도 지금 같은 워라벨 풍토에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가정적으로도 불행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경제계와 정부가 절감해야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계의 도움과 기여가 필수다. 재계가 지금처럼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인력과 노인인력 활성화가 중요시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에도 적극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지속가능을 위한 제언

- 발제자의 사회보장 재정의 총체적 점검 필요에 동의. 특히 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5대보험이 재정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 제시 필요.
-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없이 진행되는 현 시스템은 “나중에 재정이 확대되면 조정하겠다.”는 것으로 위험한 발상이며 위기를 자초할 우려
- 국민부담율이 급증하는데, 고령화로 인해 더 촉진될 우려가 크므로 조정이 필요
- 고용 증진은 젊은 층만 아니라 퇴직 연령층에도 해당. 사회적 대타협 시도 필요
- 인구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아래 새로운 인력활용책 제시 필요.

<본 연구회 소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 통일부 『통일박람회』 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32차>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

주 제 : 포용적 복지정책과 지속가능성

발표자 : 김 용 하 교수(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9대, 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 1) 조중근 회장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2)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 3) 신소정 교수 (가톨릭 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1부 사회 : 김기영 교수 (중앙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후 원 : 행정안전부

31차>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발표자 :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김미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 2)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 3) 황남희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1부 사회 : 김기영 교수 (중앙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 최 :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후 원 : 행정안전부, 백세시대신문

30차>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 수 없나?”-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발표자 :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론자 :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발표자 :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29차>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발표자 :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론자 :

- 1)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 2) 정종훈 기자 (중앙일보)
- 3)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28차>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

제 1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 1) 한국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27차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발 표 1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26차>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5차>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동주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24차>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발표자 : 성윤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3차>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발표자 :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토론자 :

- 1) 이진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 2)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박은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으로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22차>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토론자 :

-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21차>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 2)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3)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 4)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 5)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20차>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택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발표자 :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 1)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 3)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 4)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 5)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19차>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

- 1) 김헌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 2)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 3)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18차>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발표자 : 최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 2) 유근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3)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 4)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5)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7차>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 2)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3)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6차>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양점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 2) 구종회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 3)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4) 권오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 5) 이동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15차>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

- 1) 박미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 2) 김태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 3) 이명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4) 이은하 분과장(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14차>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발표자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

- 1)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3) 서병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3차>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발표자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2차>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발표자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 1)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 6)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1차>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발표자 : 신 영 석 부위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홈플러스

10차>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심윤종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 mbc 뉴스 토론회촬영장

9차>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 2) 허준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 3) 이정환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흥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8차> 2011. 12. 20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발표자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 2) 임혜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 3) 광대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5) 안명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7차>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2)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1부 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6차>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발표자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5차>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 1)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 언론-mbc뉴스토론회 풀영상 및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4차>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발표자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3) 광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3차>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발표자 : 정무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 1) 박헌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 4) 박찬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5) 윤 준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축 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 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언론-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2차>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개최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발표자 : 백종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2)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학교 교수)

1차>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발표자 : 강욱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김병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언론 기사 내용 >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주최로 열린 '노인 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2019.5.9.

한국NGO신문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정년퇴직제도의 전면적 개편과 고령자 적합직종 등 연구 및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5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상향조정은 시대적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노인복지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대안을 마련 하고자 이런 자리를 준비했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이다.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며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이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 번씩 제시를 했지만 이슈화가 못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에 제시하여 여론화 될 듯 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논의의 초점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며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차성웅 기자

데일리안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 상향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이정숙 회장 "노인연령상향조정, 서두른 시행보단 여러 가지 제도 선행이 먼저"

이정숙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은 10일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래서 노인복지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한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라면서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령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도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 김민주 기자]

백세시대

“노인 기준연령 올리되 사회보장제도 리모델링도 함께 이뤄져야”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신체·기대수명 등 여러 기준 감안할 때 노인 연령은 70세가 맞는듯”

정순돌 교수 "연령기준 올린다면 고령자에 적합한 일자리도 개발을"

이상이 교수 "노인을 초기, 중기, 후기로 분류해 복지 제공해야"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연령기준의 상향은 필요하다. 단,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 단계적으로 올리고 이에 발맞춰 사회보장제도를 점진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때 보편적 복지 대신 소득·건강 등 조건을 고려해 적합한 혜택을 제공하는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지난 5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노인 연령 상향은 피할 수 없는 화두지만 당장 영향을 받는 베이비부머들과 빈곤층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회장 조종근)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백세시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근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인연령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먼저 주제발표로 나선 정순돌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리처드 세테스틴 박사 등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노인연령기준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인연령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교수가 제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등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에서는 통계학적이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함께 정 교수는 노인연령 상향시 제시되는 쟁점들도 함께 설명했다. 예를 들어 70세로 노인 연령을 올리면 매년 십수조원이 들어가는 국가재정부담이 줄어드는지, 생산가능인구 감소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인권 측면에서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지, 은퇴 시기와 연금 개시 시기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절벽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를 토대로 정 교수는 이론상 적합한 노인연령의 기준을 선택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를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인연령기준을 올리기 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거쳐 사회보장제도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순돌 교수는 "예를 들어 70세로 노인 연령을 올린다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도 이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재취업과 관련된 교육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참가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인연령상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에 새로운 노인 연령을 적용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미령 대구대 교수는 "지하철 무임승차의 경우 연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무임승차 혜택을 줄이는 등 형편에 맞게 조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주임교수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으로 두고 각각의 사회보장제도를 상황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단행된 '국민연금 대개혁' 조치로 국민연금의 수급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올려 2033년부터 65세부터 수령하도록 한 건 그대로 유지하되 노인복지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기초연금은 상향되는 연령에 맞춰 수급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 65~69세 빈곤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노인을 보다 세분화해 해당 연령대에 맞는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65~69세를 초기 노인, 70~80세를 중기 노인,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해 각각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 현재 드러난 문제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이 교수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인연령 상향과 맞물려 정책을 재설계할 때 60대 노인과 90대 노인, 가난한 노인과 부유한 노인의 상황이 다르듯이 보다 세분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노인의 특성과 욕구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연령기준을 정립하되, 연령 외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정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숙 회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해 노인연령기준 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제도의 대응에 대한 정책 방향 설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성호 기자

“노인연령 상향조정 위한 사회적 합의 필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순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는 9일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개최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이 필요한 점을 강조했다.

주제 토론에 나선 김미령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교수)은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 지는 것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축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 번씩 제시를 했지만 이슈화가 못했다. 그런데 그동안 반대했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월에 제시해 여론화 될 듯 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논의의 초점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복지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말했다. 박찬균 기자

Silver*i*NEWS

“노인연령 상향조정, 사회적 합의 필요”

- 정년퇴직제도 전면개편, 고령자 적합직종 연구 등 준비 시급

“노인연령 상향조정, 사회적 합의 필요”

정년퇴직제도 전면개편, 고령자 적합직종 연구 등 준비 시급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지난 9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주최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 증가 속에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 회장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반대는 약 30%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려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순돌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 당시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년)이었는데, 그 동일한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 현재의 노인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과거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 교수는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령 교수(대구대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과 같이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축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이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된 후 매년 한 번씩 제시했지만 이슈화를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에 제시하여 여론화될 듯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논의의 초점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이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 간의 관련성은 엄밀히 따져보면 별로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기현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노인연령 상향조정 토론회’ 개최한다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 높이는 방안 논의’ 따라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5월 9일 프레스센터서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이하 연구회)가 오는 5월 9일 오후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인연령 상향조정 토론회’를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와 공동주최로 개최한다.

연구회는 ‘올 연초에 복지부 장관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워크숍에서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반대 30~40%보다 찬성이 55~60%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라면서 ‘그에 따라 시대적 과제가 된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해 그 과제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1981년 기대수명이 66세였을 때 노인복지법 제정 시 현행 노인 연령이 65세로 정하여졌는데 지금은 의료 기술 발달로 기대수명이 82세로 늘어났지만 지속되는 저출산으로 인구절벽이 현실화하여 생산가능인구마저 현재저 줄어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 동안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를 하고 있어 준비 안 된 노후로 소득이 없는 상태, 공백 즉, 긴 소득 크레바스 상태의 시대가 도래되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주제발표자,토론자,사회자는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2)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3)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 1부 사회: 김기영 교수(중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2부 사회: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노성희 기자

전기신문

선진복지사회학 ‘노인 연령 상향 쟁점 및 과제’ 토론회 개최

“노인 연령 올릴 필요 있지만…단계적 상승이 더욱 중요”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17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 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 연령 상향 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 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려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했다.

이 회장은 “아직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세계 1위,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노인복지 전문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통해 대안 마련을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주제발표를 진행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돌 교수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라면서 “따라서 이 노인은 현재 60세와 거의 같으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같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리적 연령 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전제했다.

그는 “노인 연령 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질 개선의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 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인 김미령 교수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특히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이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 번씩 제시했지만 이슈화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반대했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 1월에 제시해 여론화될 듯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으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황남희 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의 노인 연령 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논의의 초점을 ‘노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 정책은 지속 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인 이상이 교수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아래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지,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박정배 기자



“노인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가 필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토론회 개최, “다양한 양질의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성남일보]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지난 9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노인연령상향 쟁점과 정

책과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정순돌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에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로 그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의 나이는 72세로 현재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며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고,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미령 교수(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 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 지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등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감소할 경우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은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이 의견 제시가 시작된 후 해마다 한 번씩 제시를 했지만 이슈화가 못했다”면서 “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을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 제시해 여론화 될 듯 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함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 바꿀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노인복지정책은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이 있을 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별로 관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상향조정은 시대적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나오고 반대는 30% 정도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리어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태섭 기자



65세 노인 연령? 이젠 시대에 맞지 않다

[복지국가SOCIETY]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박근혜 정부 시기였던 2016년,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당시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이를 두고 다분히 '관제 문제 제기'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요구로 대한노인회가 이런 제안을 내놓았다는 것인데, 노인의 일반적 이익을 옹호하는 중앙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노인의 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심지어 이로 인해 노인복지의 총량이 줄어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복지비용의 감축 내지 증가 둔화를 추진하려는 보수 정권의 기획쯤으로 간주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다.

당시 우리 사회는 대한노인회가 제안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과 사회보장 간의 관계를 놓고 토론을 벌였는데, 더러는 이 이슈가 주요 언론과 인구에 회자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 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복지에 소극적인 보수 정부에서 이런 논의가 제기됐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는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그래서 이후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이슈는 폭발적으로 확산되기도, 제대로 된 정치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밟지도 못한 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이 이슈가 다시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제기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이슈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고, 복지의 확대를 추구한다. 사회보장 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노선을 두고 늘 제기되는 이슈는 역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다. 보수진영과 일부 전문가들만이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결부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걱정하는 데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예외일 순 없다.

지난 1월 2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연령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 정부가 아니라 사회보장의 확대를 국정운영의 방향으로 제시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정부에서, 그것도 복지재정의 규모를 걱정해야 하는 경제·재정 부처의 주무 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을 제기했다. 그러므로 이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이슈는 정치·사회적 논의의 장에 올라서기가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이슈는 아주 예민한 것이고, 일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무조건 담보되는 것도 아니다. 별 성과나 소득도 없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조치는 몇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인다. 노인의 수가 줄어들면 노인에게 지출되는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다. 가령,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기존의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연간 약 3조 원의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노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과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를 늦추게 된다. 현재 생산가능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인데, 노인연령 기준이 70세로 상향 조정되면 생산가능인구도 69세까지로 확대된다. 셋째, 노인 차별 인식이 개선된다. 노인연령 기준이 높아지면 노인의 생산적 역할과 사회적 참여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이미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선진국들에서는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탈리아 노년학회는 노인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고, 일본 노년학회도 노인연령을 삼분하여 65~74세를 준고령자, 75~89세를 고령자, 90세 이상 노인을 초고령자로 구분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반드시 은퇴와 사회보장의 수급이라는 중요한 요소와 결부돼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년학의 학술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이 이슈를 조심스럽게 다룰 필요가 있다.

소득 보장과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관건은 기초연금

일반적으로 소득은 근로를 통해 얻는다. 소득 단절의 위험은 사회적으로 늘 존재하는 만큼,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소득 보장 제도가 공적 노령연금이고, 우리나라에서 공무원·교직원·군인 등이 가입한 특수 직역연금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한다. 소득 보장 제도의 중요한 점 하나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각지대는 보편적 가입(적용)이라는 '실질적 보편주의'의 첫 번째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를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실질적 보편주의의 두 번째 원칙은 적정 보장성(소득대체율)인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공적 노령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한, 노후소득은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같은 우리 사회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논의의 별로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질적 보편주의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낮은 보장성 문제를 차츰 해결해 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이슈는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 엄밀하게 대답하자면, 양자 간에는 관련성이 없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루어진 '국민연금 대개혁'으로 인해 2008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5년마다 1세씩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수급 연령이 당시 60세에서 차츰 늦춰져 2033년이면 65세로 상향된다. 2019년 현재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2세인데, 이는 노인연령 기준보다 3세나 낮다. 그러므로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굳이 노인연령 기준에 맞추려고 애를 쓸 이유는 없다. 이는 노후소득 보장과 재원조달의 지속 가능성이라 별도의 논리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다.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 은퇴연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 은퇴연령은 60세인데, 2019년 현재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인 62세와 '2년의 차이'가 난다. 만약 은퇴연령이 60세로 고정된다면 앞으로 그 간격은 더 벌어질 것이고, 이는 '일생에 걸친 보편적 소득 보장'이라는 복지국가의 기본 원리에 어긋난다. 그래서 선진 복지국가들은 은퇴연령과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시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노르웨이는 은퇴연령이 67세다. 독일과 일본은 현재 은퇴연령이 65세인데, 독일은 2027년 67세로 연장하고 일본은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은퇴연령이 65세 또는 그 이후인 반면, 우리나라는 60세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나라는 이미 정해진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 스케줄(2033년까지 65세)에 대응하도록 은퇴연령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작업에 먼저 착수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후의 추가적인 공적 노령연금 수급 연령 상향 논의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해서 노인연령 기준이 중요한 지점은 따로 있다. 바로 노인을 위한 사회수당인 기초연금이다. 2008년 1월, 이 제도가 처음 실시될 당시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기초연금(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이었음) 수급자였으나 그해 7월부터 수급 연령이 65세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은 월 20만 원이 지급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이 작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그리고 올해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내년 4월에는 소득하위 40%까지, 그리고 2021년 4월이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을 모두 합하면 15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기초연금액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결국 기초연금을 4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문제는 역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다. 급속한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조건을 고려해볼 때, 지속 가능성이 작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노후빈곤이 심각하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그렇다면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나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붙어야 한다. 첫째, 기초연금은 보편적 사회수당이므로 70세 이상의 노인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70세 미만인 노인 중에서 기초연금이 제공되지 않음으로 인해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 상태이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분들이 없도록 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를 더 늘리도록 해야 한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70세 미만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과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65세부터 69세까지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이 연령대에서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 인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어떤 경우라도 기초생계를 위한 공적 이전소득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대명제가 전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추후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하위소득 계층부터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근로 의욕이 있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노인을 위한 각종 일자리 사업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가 내실 있게 진행돼야 한다. 결국,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 이슈에 비하면 규모가 작긴 하지만, 지하철 무임승차도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중요하게 관련돼 있다. 이 이슈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를 한다면 무임승차의 연령 기준을 70세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65~69세 인구 중 절대빈곤에 가까운 상대빈곤 노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교통복지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보장과 노인연령 기준,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필요

단적으로 말하자면, 사회서비스 보장과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관련성이 별로 없다. 혹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제도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마치 이들 양자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는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초연금 같은 소득 보장 제도와 달리 서비스에 대한 필요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나이가 66세든 76세든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면 의료서비스 보장 제도의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해야 하는 것처럼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나이를 연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를 두고 2008년 7월부터 실행되고 있다. 법 제1조(목적)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제2조(정의)는 제1조에 언급된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로 정의한다. 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대상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이지, 65세 이상의 노인인지 70세 이상의 노인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무관하다. 돌봄 필요에 기반을 둔 서비스 보장 제도일 뿐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이용 시점에서 노인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인 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조치를 어느 연령대로 제한할지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이런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적 재정 지출은 무시하지 못할 규모이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64세 이하 환자가 동네의원·한의원·치과의원에 갔을 때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한다. 이와 달리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 외래정액제'가 적용된다. 동네의원·치과의원·한의원(투약 없는 경우)의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1500원만 낸다. 1만5000원 초과부터 2만 원까지는 10%를, 2만 원 초과부터 2만5000원까지는 20%, 2만5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0%를 낸다. 그리고 약국에선 1만 원 이하일 때 1200원, 한의원에선 2만 원을 넘지 않으면 2100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노인에게 깎아준 정액진료비는 4696억 원이다. 앞으로 정부는 현행 65세인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는 기존의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것은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조치가 OECD 평균인 80% 수준까지 추진됨에 따라 법정 본인부담률을 모든 연령층에서 지금보다 더 낮추어야 할 것인 바, 이런 조치를 노인 연령대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보는 게 옳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의학적 관점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다면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나이에 따른 구분이 없어야 한다. 이에 더해, 도덕적 해이가 없을 만한 조건을 갖춘다는 전제 하에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의 노인 외래정액제 적용 기준은 그대로 두는 게 옳을 것이다. 게다가 이 사안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과 어떤 관련성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틀니를 사례로 들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틀니를 국민건강보험 급여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틀니의 본인 부담률은 30%이다. 틀니를 하는 데, 위쪽과 아래쪽 각각 본인부담금이 40만 원쯤 된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 약 400만 원 정도를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틀니를 장착하기 위해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노인 임플란트는 2개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임플란트는 본인부담률 30%로 본인부담이 하나에 약 40만 원이 좀 안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65세 이상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62세인 사람은 의료서비스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 나는 이런 연령 제한 조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로 미룰 것이 아니라 적용의 연령 제한 자체를 없애는 게 옳다. 틀니 서비스가 필

요한 인구는 '후기 노인'일 확률이 크겠으나 개인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이른 나이에 틀니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필요가 존재한다면 공적 방식으로 제공하는 게 옳다. 결국, 사회서비스는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필요의 크기이기 때문이다.

획일적 연령 조정보다 연령별 노인 인구에 대한 경제사회적 대책 세우야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연령 기준은 언제나 65세였다. 평균수명이 67세일 때도, 72세이던 때도 언제나 노인연령 기준은 65세였다. 그런데 이제 평균수명(출생 시점의 기대여명)이 83세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수명이 길어지면 노인연령의 기준도 상향 조정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노인들도 노인연령 기준 65세는 정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래서 노인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의는 정치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보장 제도의 일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이다. 지하철 무임승차도 관련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현금성 노인 복지 지출도 마찬가지이다.

기대여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연령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학술적 차원을 넘어 현실에서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67세 노인은 이제 더는 노인이 아니"라거나 "생산가능인구의 상한은 이제 64세가 아니라 69세"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가 쉽지 않다. 결국 65세가 노인이라는 오래된 인식은 변하기가 어렵고, 또 실제로 65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각종 노인성 변화가 오는 것도 사실이다. 결국, 65세인 기존의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림으로써 65~69세 인구를 인위적으로 노인에서 제외하는 것과 같은 획일적 방식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본다.

엄밀하진 않지만 65~69세를 '초기 노인'으로, 70~80세를 '중기 노인'으로, 그리고 80세 이후를 '후기 노인'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해서 각각의 연령별 노인 인구에 대해 경제사회적 대책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싶다. 대체로 이렇게 되면 노인 일자리, 소득 보장, 사회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노인의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구획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서 '중요한 의제는 충분한 정치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칼럼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등이 주최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2019.05.09.)에서 필자가 토론했던 글을 중심으로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둡니다.

<공 지 사 항>

1.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1박 2일 공감여행

- 일 시 : 2019. 08. 17~18
- 장 소 : 강화도 석모도
- 멘티 女청소년 20 명, 멘토 女중장년층 20명

2. 제 5회 힐링등산 & 토크콘서트 & 장기자랑

- 일 시 : 2019. 09. 28
- 장 소 : 양평 용문산, 용문야외공연장
- 참석대상자: 중장년 남녀 약 200명
- 신청: 1) 이메일 2silent@hanmail.net
2) 전화 및 문자 070.8793.5202
3) 성함/ 주민번호(여행자보험 필수)/전화번호/ 지역
- 참가비: 없음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입니다.

3.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Talk 콘서트

- 일 시 : 2019년 11월 7일 (목) 오후 2시
- 장 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 출연자 : 차홍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前 복지부장관)
성규탁 연세대 명예교수(효문화연구소 소장)
조성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협 력 기 관: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민소현)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정책의 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9988234』

수료증 및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5-001578호)